



한미 FTA협상... 우리업계도 대책을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국내 오리산업이 최근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제는 5대 축종이라고 이야기될 정도인데요. 오리산업의 성장비결은 무엇인가요?

2003년도의 AI와 2004년 겨울의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오리업계는 재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오리사육 농가가 전년보다 5%가 증가한 8천9백 농가에 이르고 사육마리수도 840만 마리로 증가했다. 축산업의 생산액이 10조 원 정도로 그중 오리산물의 비중은 약 5%인 5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10년 전 보다 20배나 성장한 수치다. 오리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협회를 중심으로 상업용 종오리를 유전능력이 검증된 PS종오리로 대체하는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오리생산을 위해 각종 기능성오리를 개발하고 오리진흙구이, 오리훈제, 오리햄, 오리로스, 오리소세지 등 새로운 가공법 개발에 힘을 기울인 결과다.

한미 FTA가 가져올 오리분야의 피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오리의 관세는 18%인데 타농산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오리고기를 수입할 때 큰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돼 관세 제로세율이 된다면 당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에서도 제로세율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현재 종오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2~3년 내에 우리 오리 업계도 오리 GPS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종오리 수급체계가 완결되기까지 전면 수입개방은 막

아야 국내 오리 산업의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오리 GPS사업은 고사하고 육용오리도 외국에 의존하게 돼 결국 오리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발미로 작용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오리 산업의 성장에 걸 맞는 정책 지원과 배려도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사실 오리 업계는 AI발병 당시를 빼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도 오리업계는 표준축사가 없어 축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리 간염바이러스는 오리에겐 AI에 버금가는 무서운 질병으로 제1종전염병으로 분류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제는 양계산업과 마찬가지로 GPS사업 실시로 안정적인 종오리 수급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D/B사업)사업 실시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8월 이후 시작되는 오리 비수기를 대비한 소비홍보를 위한 지원 등도 상시 필요하다. 이 중 몇몇 사업은 가금수급안정기금으로 시행을 하려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지된다 하니 정부는 상응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여 오리업계가 자립을 위해 열망하는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축종에서는 자조금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오리업계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자조금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만이라도 가금수급안정기금에 준하는 자금마련과 오리산업의 자립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시급한 시기다.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2006-08-03